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한국민주주의론

최장집 지음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김만흠 지음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7

김동춘

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80년대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제도, 정부형태, 이익대표의 방식,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보려는 다원주의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다원주의 이론에는 국가의 개념이 생략되어 있었고 오로지 정부와 제도만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80년 신군부의 등장과 제5공화국의 수립은 경제성장이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의 입지를 완전히 박탈하였으며, 그 대신 민주주의는 곧 계급권력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맑스주의 정치이론이 풍미하게 되었다. 그후 민주주의는 제도, 절차 혹은 대표의 형식이 아니라 고전적인 정의인 “다수의 지배”, 즉 사회의 생산대중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력장악의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실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金東樞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저서로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등이 있음.

하였다. 대의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아직 없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려운 과제라는 보비오(Bobbio)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론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0년대의 민주주의론은 80년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사회적 제약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좀더 성숙된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최장집(崔章集)과 김만흠(金萬欽)의 저서는 이러한 한국 지식사회가 하는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우회 과정이 최장집 개인의 입장 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80년대 말 그는 실질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다원주의, 경쟁적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있다. 이 두 저서는 지금 국면에서 한국 민주주의론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이론적·분석적 능력을 보여주며,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저작이라고 생각된다.

②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은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 자본주의적 산업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과거 입장을 종합하면서 이것을 통시적인 시각에서 정리하고 또 김영삼정권의 성격, 지역주의, 언론문제, 노동운동, 통일문제 등에 대해 입론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종속적인 변수로 본다면 그가 동원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조건 특히 외생적인 조건의 산물인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시기와 특성, 즉 후후발산업화이다. 이러한 국가형성과 산업화에 의해 한국의 국가와 정치사회·시민사회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매우 빨리 도입되었으며 정치사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정당은 사회의 분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조직되었으며 시민사회의 이익대표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전쟁이 가져온 이중적인 효과 즉 고도성장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며 권위주의화의 물질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사회가 저항과 정치변동을 가져오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시민사회는 스스로 변혁의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와같은

정치적 역학관계는 수동혁명 혹은 변형주의를 만성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이 정치사회 내의 진보적인 개별인자들을 흡수하여 계속 집권에 성공하며, 역사적으로는 야당보다 더 진보적인 측면을 지니기도 하는 지난 시기 한국의 정치사를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한다.

그는 이 책의 모든 논문에서 역사적 통찰력과 분석적 시각을 결합하고 있다. 그는 국가형성의 과정과 한국전쟁이 4·19와 5·16이라는 전혀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정치현상에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박정희의 권위주의가 오늘날의 문민정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 분단과 냉전이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이들 외생적 변수가 내생적 변수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정치현상을 단순히 정태적으로 파악해온 기존의 한국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지역균열이 분단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백낙청도 ‘분단체제론’에서 거론한 바 있는데, 한국의 사회현실을 역사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만이 지적할 수 있는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은 정치적 권위주의화와 고도성장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진행되어왔다는 점, 경제성장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실패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이 그러했듯이 엄청난 폭력과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여기서 월러스틴(Wallerstein)이 말한 ‘기술발전으로서의 근대’가 ‘해방으로서의 근대’를 압도하는 현상,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공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새삼 목격하게 된다. 오늘날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한계는 박정권이 닦아놓은 물질적·사회적 토대에 기인한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가 말하듯이 박정희는 재벌의 힘을 통해 다시 살아나 김영삼정권의 실패의 공간 속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배력 혹은 박정희의 유산은 오늘날의 시민사회 혹은 정치사회의 역학관계로 내면화하여 우리의 비틀거리는 민주주의를 여전히 좌우하고 있다.

이 저서에 담긴 그의 문제의식은 초기 저작인 박정권하의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노동정치, 그람시(Gramsci)에 대한 관심을 연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질문이 주로 운동의 성장 혹은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과 그 장벽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적어도 경제성장에서는 성공했다는 전제를 깔고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신흥공업국

의 주도국이 되었는가” 하는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이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성장을 찬탄하면서 제기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6, 70년대 박정권의 등장 및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 실제 “산업화가 국민들로부터 열정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화의 진보적·발전적 측면을 강조하는 오늘날 미국·일본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논의와도 통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주장하는바 한국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야당과 운동세력만이 아니라 여당 혹은 집권세력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남미의 조합주의(corporatism)와 같은 차원에서 박정권에 대한 농민의 지지, 새마을운동이나 각종 관변 농민조직화 등을 ‘적극적 지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지적하기는 하나 4·19와 5·16의 연속성, 한국 민족주의의 분열적 측면 등을 지적하는 데서도 그는 서구 자유주의의 입장에 더욱 근접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

③ 김만홍의 『한국정치의 재인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는 튼튼한 이론적 전제를 기반으로 한국의 정치갈등이나 선거정치를 분석한다. 제2부 ‘지역주의와 정치갈등’은 오늘날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인 지역주의를 그 객관적인 배경과 원인, 해결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접근한다. 제3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91년 민주화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한 양식으로 도입된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전망 속에서 다룬다. 그는 한국정치의 발생경로가 시민혁명을 거친 서구와 달리 시민사회의 동원을 억제한 제국주의 지배의 경험 및 해방 후 선거제도의 급속한 이식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사회적 균열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균열, 만물상 정당, 정책대결 없는 정당, 최초의 정치적 동원으로서의 지역주의, 지역·세대·교육 변수가 계급변수를 압도하는 현상들도 이러한 배경의 산물로 본다.

그는 지역균열,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는 최장집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정권교체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고리라고 본다. 그는 현재의 조건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정권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또 민족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는 지역의 한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김대중과 야당의 딜레마를 인정하면서도 탈지역주의적인 정권교체론이 오히려 집권세력의 정권연장 논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는 지역주의가 정부의 권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신 지역권력을 중앙정치에 대표할 수 있는 ‘지방회의·전국회의’ 같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그는 지방자치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지방자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지방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비민주체제의 현상유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계하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개념하에 지방사회 자체가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력한 중앙집중제의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시민사회의 동원화 경험은 대단히 일천하다고 지적하면서 집권세력과 연결된 행정관료 및 정치인, 토착 지배계층이 중앙권력을 하청받아 지역의 정치권력을 행사해온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시민 참여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 형성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만홍의 작업 역시 정치의 문제를 정치제도·정당·엘리트의 문제로 국한시켜온 그간의 정치학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경과라는 맥락에서 정치과정에 접근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중들이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직접 참가할 때만이 민주주의의 전망이 열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가 근대의 산물,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 시절 조성된 지역패권주의의 산물이며, 권위주의의 붕괴가 곧 권력의 사회적 기반 확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지역주의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그의 분석도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안목을 잘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이다. 한편 그는 서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정치사상사의 다양한 고전들에서 제기된 풍부한 개념들을 한국정치의 분석에 도입하고 있어서 현상적인 정치과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그간의 경향들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가 기존 정치학의 서구주의적 접근의 병폐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 접근방법, 대안적 전략들을

분명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서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가형성 특히 분단이 한국정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며, 전통적인 정치문화가 현대의 정치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늘날 지역단위에서나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제약인 재벌의 사회적 지배 및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권력 자원을 단순히 개인으로서 시민의 참여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동안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과 그리고 그것이 향후 한국의 민주화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접근은 오히려 국가보다는 정부 혹은 선거정치에 주로 관심을 보여온 기존의 정치학적 연구와 더욱 근접해 있는 인상을 준다.

④ 최장집과 김만홍의 분석은 모두 오늘날 한국정치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 저자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최장집은 분단국가 형성과 산업화가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발전이라는 이중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만홍은 시민사회의 약체성, 영남정권의 지역패권주의, 중앙권력의 지배가 지역주의 및 지역단위에서의 비민주성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최장집은 이러한 정치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제민주화, 효율성과 힘을 겸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고, 김만홍은 지역간의 정권교체와 지역에서의 민주화 및 주민 참여 그리고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바탕을 둔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 형성을 강조한다. 지역주의가 한국정치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나 최장집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데 반대 김만홍은 정권교체의 실현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두 저작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발생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을 그릴 수 있다. 이들의 분석은 국가 혹은 정치는 곧 시민사회의 문제라는 정치경제학의 기본원칙을 새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이 '거저 얻은' 민주주의를 진정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듯이 앞으로의 과제도 결국은

‘조속한 민주주의’를 시민사회에 착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최장집이 말하는 민중성과 근대성의 결합 문제, 변형주의의 극복, 즉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민주주의의 과제로 연결된다. 그것은 결국 재벌과 언론의 힘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여기서 두 저자의 대안은 문제제기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시민사회의 밀도의 강화 즉 조직적인 노동운동과 집합행동은 민주화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지만, 그것은 생산성을 침해할 위협을 안고 있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기는 하나 어떤 조건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무엇이 참여를 가로막는가 하는 추가적인 의문에 대해 이들 두 저자는 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전반적으로 “누가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관심의 축이 크게 이전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제도 내 정치가 아니라 제도 외 정치, 제도 외 사회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더욱 근본적인 지점이 분명하다면 민주주의의 희망은 결국 사회운동, 민중과 시민의 조직화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는 신세대들의 이른바 탈정치화 현상, 중간계급의 보수화, 노동계급의 계급이기주의 문제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민의 파편화·교묘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전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앤더슨(P. Anderson)이 기든스(A. Giddens) 등의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 혹은 담론주의에 대해 가한 비판이 연상된다. 과거는 물론 지금도 민주주의는 집합적인 투쟁의 결과였다는 점, 민주주의는 특권층의 이익을 제약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이다. 테르본(Therborn)은 노동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최장집이 누차 강조했듯이 조직된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재벌과 언론에 대해 통제를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셈이다. 어쩌면 자본의 독재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였던 80년대보다 더욱더 자본의 힘은 민주주의의 가시적인 위협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힘있는 민주주의’, 즉 경제적 효율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대립시키지 않고 경제적 복리와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튀니에스(Tönnies)가 말한 것처럼 가족이야말로 공동사회의 원형이며 권위주의 재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가족질서 특히

직계가족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질서의 수립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제도의 개편은 한국 민주화의 장기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가족질서의 개편 문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전통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즉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분히 ‘고립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경계하듯이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가져온 탈정치화, 정치적 무관심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참여는 개인의 권리의식에 바탕을 두기도 하지만 연대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열정에 기초하기도 한다.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개인의 권리의식에 기초한 참여는 익숙지 않지만, 집단의 목표에 대한 헌신과 참여는 상당히 활발하다. 문제는 그것이 권위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치문화를 개인주의적인 정치문화로 바꿀 때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미 ‘실패가 예상되는’ 서구의 경로를 어리석게 뒤쫓아가는 일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힘있는 민주주의란 바로 가족질서의 재편과 가족질서의 장점을 보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하와이대학의 서대숙(徐大肅) 교수는 몇년 전에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왜 한국에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도 물음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썩가포르의 전 수상인 리관유(李光耀)와 말레이시아의 총리 마하티르(Mahathir)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구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권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권리는 공동의 덕목에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집단의 자주성이 없이는 개인의 자주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체 논리를 연상시킨다. 그들의 주장을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조건에서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를 의문의 여지가 없는 보편가치로 받아들이는 정치학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학생과 지식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생산계층은 물론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조차도 단순히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재정권을 용인했으며 생활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사회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빈곤의 탈피를 위해 민주주의를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6, 70년대 한국인들이 이 사회의 지배층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공허한 구호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나의 절차·형식·방법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어떤 민주주의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부딪치게 된다. 이 두 저자의 글에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 즉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형평과 정의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되었을 따름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이나 경제가 위기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론은 언제나 그것이 “개인의 권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집단의 생존인가” 하는 반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주의가 개인주의적인 덕목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과 발전의 하위개념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성장, 복지를 명분으로 한 생존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최장집이 강조한 힘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과도 통하는데, 민주주의가 하나의 수단가치가 아니라 목적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혹은 ‘집단의 생존’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라는 자유주의·사회주의·보수주의의 논리와 다시 부딪치게 된다. 60년대 이래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괴롭힌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다. 성장의 논리에 대한 민주주의의 왜소함, 민중들이 탈빈곤을 위해 독재를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논리는 배부른 자의 잠꼬대로 치부되기도 했다. 오늘날 세계화의 국면에서 자본의 논리에 계속 밀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국 민주주의론 그 자체로는 ‘힘있는 민주주의론’이 되지 못하는 딜레마를 우리는 발전하게 된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